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가을악취 주범' 은행나무 암수교체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음 8월 28일) 제263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시도지사 지역균형뉴딜 해법 모색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송 지사 "거버넌스 개편,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한국판 뉴딜과 지역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균형뉴딜 해법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의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관련기사 3면〉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개편과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개최를 표명한 것에 따른 것이며 당정을 넘어 지방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는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중앙 관계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을 제시했으며 이를 한국판 뉴딜 지역참여,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 등 3가지 유형과 4개의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4대 추진전략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 강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원조달 지원, 인센티브 제공, 투자절차 간소화 등 추진,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한 한국판 뉴딜의 지역확산 가속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등이다.

또한 6개 시도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액화수소·재생에너지·해상풍력 기반의 그린 뉴딜 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으며 시도지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지역 주도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예타면제 등의 사항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전북형 뉴딜 추진방향으로 먼저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전북의 농생명산업 기반과 IT를 융합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며 '그린 뉴딜' 분야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 그린 모빌리티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해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보다 진전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제시한 것을 환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추진체계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 신설을 제안하면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하는 소극적 지원이 아닌 진정한 지방참여형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부처의 공모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지역균형 뉴딜사업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1단계 재정분권의 한시적 추진과 관련해 3조 6,000억원 지원의 한시 기한을 폐지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대안 수립과 지역뉴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지방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회의체가 구성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미래 사회경제 구조를 설계하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면서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한국형 뉴딜 전략회의를 마친 후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을 분리해 심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에 근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유호상 기자

'골든씨드 프로젝트' 실효성 의문
수출 고작 78억… 목표대비 23%

이원택 민주당 의원 꼬집어

농촌진흥청이 추진중인 '골든씨드 프로젝트'의 수출성과가 목표대비 23%에 그치고 있는 등 실적이 저조해 내년 사업종료까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 골든씨드 프로젝트 식량사업단과 종축사업단의 2021년까지 수출목표는 2,875만달러(현시세 330억)였지만, 2020년 8월 기준 실제 달성액은 681만달러(현시세 78억)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씨드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4,91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통한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이 참여해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을 통한 종자강국 실현을 목표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농진청은 골든씨드 프로젝트에서 식량종자(벼, 감자, 옥수수)분야와 종축(종돈, 종계)분야의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식량사업단은 벼의 경우 베트남, 미얀마, 터키·유럽을 목표로, 옥수수는 인도, 동남아, 중국을 목표로, 감자는 중국, 베트남 중앙아시아로의 수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수출목표는 2,600만달러(현시세 299억)였지만, 대실제 수출 실적은 목표 대비 25% 수준인 657만달러(현시세75억)에 그쳤다.

종축사업단 역시 종돈의 경우 베트남을 목표로, 종계의 경우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종돈은 수출로 이어지지 못했고, 종계는 키르기스스탄에 24만불(현시세 2억) 수출한 것이 전부다.

이원택 의원은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SCI급 논문도 다수 나오고 특허도 출원돼서 일정 부분 성과는 달성했으나,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수출은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8년간 쌓아온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국내 종자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나 나갈지 구체적 추진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연이은 태풍 피해복구비 228억 신속 지원"

전북도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으로 주택파손 및 농축업 피해 주민들에게 국비 교부 전에 신속 지원을 위한 선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도내 피해농가 2만2,352세대에 228억원이며 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도 예비비 56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13일 시군에 집행했다.

도는 지급액의 부족분인 172억원은 시·군비로 우선 지급하고 향후 국비가 교부되면 예산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주택파손 5동, 벼 도복 등 농작물 피해 2만2,627ha, 농축산시설 70.9ha의 사유시설 피해로 피해액은 16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 신고와 현장 조사, 복구계획 등을 수립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으며 지난 9월 29일 중앙심의를 거쳐 피해복구비가 최종 확정됐다.

복구비는 총 248억 원으로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2만2,352세대 228억원이며 남은 20억 원은 융자금 14억 원이 간접 지원되고 자부담은 6억원이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만 확정되었을 뿐 복구비의 50%에 해당하는 국비 114억원은 교부가 안 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와 시군은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도비와 시군비로 재난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각 시군에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